

월/요/광/장

이원규



요즘 들어 부쩍 지리산의 빈집을 구해 달라는 전화를 자주 받는다. 마땅한 집이 없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21세기 문명 사적인 ‘타닌 포인트’요, 아름다운 일이다. ‘녹색성장’이나 ‘4대강 살리기’ 혹은 ‘서민 중심’이라는 항간의 독점적 언어 폭력과 는 전혀 다른 얼굴이다.

그러나 돌아켜보면 많은 사람이 꿈꾸는 생태적인 삶과 귀농·귀촌·귀향이 다 옳은 것만도 아니다. 굳이 지적하자면, 귀농·귀촌을 꿈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멋진 집을 짓고픈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다.

먼저 풍수지리를 공부하게 되고, 마을에서 적당히 떨어진 자연풍광이 뛰어난 곳에 땅을 사고 포클레인으로 터를 만든 뒤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어한다. 생태 건축의 양식이든 아니든 그 가당한 꿈을 이루길 수만은 없다.

하지만 이런 발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모든 집이 그렇듯 막상 설계를 마치고 집을 짓게 되는 순간 애초의 계획 보다 더 많은 비용(적어도 30% 이상)이 들게 된다. 말하자면 적응기간의 예비비

가 그만큼 줄어드니 차라리 도시에서의 순응적 불안감보다 더 심한 고통과 마주치게 된다.

몇 개월 지나고 보면 귀농생활의 수입이란 것이 실제로는 월 몇만 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신이 산 땅값마저 지역 주민의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샀다는 것

귀농·귀촌의 자화상

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행여 다시 되팔려 해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돈 많은 도시인 혹은 또 다른 귀촌을 꿈꾸는 이들에게 되팔 수밖에 없으니 이 또한 ‘암묵적인 사기(?)의 카르텔’ 형성에 동조하게 됨으로써 남모름 죄의식에 휩싸이게 되고, 남은 예비비는 꽃값 빼먹듯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압박감이 뒷골을 엄습해 온다.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돌아갈 수도 없는 헛꿈을 꾸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나 본 듯한 혹은 이미 정착에 성공한 몇몇 지인들의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생태적인

설계를 했으나 이 또한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한 발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동시에 소위 ‘녹색성장’이라는 두 얼굴의 행태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는 공여지책이거나 속도전적인 패착이 아닐 수 없다.

지리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바닷가와 산중과 강변에는 이렇게 수많은 집들이 들어서고 있다. 걸만 보면 참으로 멋진 집이지만 사람의 마을과는 단절된 사유재산적 공간에 불과해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혹은 생태적 파괴에 동조한 셈이 되는 것이다.

막상 살다가 깨닫게 되는 문제는 비단 이

머리로는 느림의 미학을 꿈꾸었으나 그 모든 게 너무 빨라서 자초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 과정을 뼈아프게 거치고 나면 비로소 천천히 자연의 한 몸으로 돌아오게 된다. 다만 때로는 빠른 것이 오히려 늦은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말이다.

만약 똑 같은 조건으로 귀농한다면 전혀 다른 방법도 있다. 우선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을의 빈집을 구하고 그 마을 주민으로서의 적응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지혜와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갖추며 최소한 사계절을 살아본 뒤에 집지를 땅을 사더라도 절대 늦지 않다.

왜냐면 마침내 주민들의 시세에 맞게 살 수 있다는 경제적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집터에 대한 풍수지리적 이해가 두루 갖춰지기 때문이다. 될 수 있으면 이미 수백 년간의 검증이 끝난 빈집을 취향에 맞게 고쳐서 사는 게 훨씬 더 생태적인 일이지만, 굳이 새로이 집을 짓겠다면 말이다.

자연 속에 집 한 채를 짓는 일이 어려할진대 하물며 ‘녹색성장’의 주동력이라는 ‘4대강 살리기’로 대변되는 한반도 유사 이래 가장 위험한 ‘역전(逆天)의 삼절’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 무지막지함애 눈앞이 캄캄하다.

(시인·지리산학회 대표교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이호석

역지사지(易地思之). 이는 상대방과 처지를 바꿔 생각하라는 의미다. 이 말은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갖추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필자가 다루는 고소사건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닫은 채 대부분 자신의 말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같이 당사자

들끼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사건 해결 과정에서 생긴 오해와 감정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사가 중재자로 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어느 정도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당사자들이 오해를 풀고 합의점을 찾아 고소를 취하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문제에 접근했다면 수사기관까지 올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과 느낌은 가정·중증·아파트·중고시설과 같은 공동체 내에서의 분쟁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이 같은 모습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을 볼 때 절실하게 와 닿는다.

필자는 초임시절 오로지 피고소인의 처벌만을 요구하며 극한 행동을 보이던 고소인을 본 적이 있다. 고소인은 목욕탕 운영 문제로 피고소인과 수년간 고소·고발을 반복하면서

생업도 포기하고 송사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른 검사실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담당 검사의 얘기를 들어 보니 서로 싸우기만 해 조사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필자도 어렵사리 조사를 마치고 고소인과 면담을 했는데 고소인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증거관계상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이점을 고소인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고소인은 “알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복도에서 고성이 들리고 무언가가 바닥에 내던져지는 소리가 나더니 고소인이 다시 필자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고소인은 필자에게 “기소하지 않으면 여기서 송장을 보도록 해 주겠다”고 소리치며 수면제와 진정제를 삼켜 버렸다. 빠른 조치 덕분에 고소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고소인은 다음날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고소인은 필자에게 “정말 기소할 수 없느냐”고 물은 뒤 필자는 증거가 없는 이상 기소

쟁송(爭訟)전에 역지사지

홍수에 강한 영산강을 만들겠다

나면 나누라와 자식새끼를 제외하곤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수해에 안전한 영산강은 가장 간절한 소원이자 희망이었다. 그래서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강바닥을 준설한다고 할 때 제일 반기는 사람들도 이들이었다.

이들은 준설 등 영산강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관계자들에게 “직접 꺾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자신이나 가족들이 재산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 묻고 싶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수십 년 동안 장마철만 되면 범람이나 침수피해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영산강 유역 주민들. 이런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올해 우기는 남다르다. 영산강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면서 영산강이 홍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나주에 140mm의 비가 내렸을 때 영산강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영산강이 홍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졌다. 이제는 발을 뺀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감격해 했다.

평생 영산강을 보면서 살아온 주민들은 준설로 영산강의 수위가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었다. 실제로 영산강살리기사업을 통해 영산강은 이전보다 홍수 위험으로부터 훨씬 안전해지고 있다.

우선 남산의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양의 퇴적토 준설을 통해 물그릇이 이전보다 10~14배나 커지면서 영산강의 수위가 떨어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비가 내린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영산강 광주지점의 수위가 1.12m 낮아졌다. 또 영산강홍수통제소가 나주대교 상류의 수위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올해 평균 수위가 2.5m 떨어진 것

기 고



김일평

흔히 영산강을 남도의 젖줄이라고 말한다. 과거 광주와 나주까지 배가 드나들던 시절 영산강이 남도를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영산강은 남도민들의 자존심이자 풍요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영산강은 더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강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영산강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나주 영산포에 사는 한 주민은 “영산포 강변에 사는 주민들은 과거 사진이나 추억이 필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한탄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로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민은 “집에 물이 한번 들고

노령인구 갈수록 증가…뇌졸중 응급체계 강화해야

날이 갈수록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다고 한다.

뇌졸중은 생명을 건져도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때문에 뇌졸중과 같은 급성질환은 평소에도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야 한다.

최근 연세가 일흔에 가까운 지인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서둘러 병원으로 후송하고 치료조치를 했지만 안타깝게 작고했다. 평소 건강하셔서 당시이나 가족 모두 뇌졸중은 걱정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모두 안타까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의료 체계가 부실하고 집중 치료 기관도 부족하기 때문에 뇌졸중과 같은 급성질환 대처에 문제가 많다.

뇌졸중은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이른바 ‘골든타임’, 즉 생사가 달린 3시간 이내에 처치를 받고 막힌 뇌혈관을 뚫는다면 생존확률은 올라가고 후유증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 시간 안에 실제 응급실에 도착하는 환자는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 80%는 사망하거나 다행히 목숨을 건져도 큰 후유장애를 앓게 된다.

노령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뇌졸중에 대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윤진규·여천시 신덕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시 설

광주 구도심 재생 ‘땀질 처방’ 안 된다

광주천 주변이 ‘고층 아파트 숲’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한다.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집중된 광주천 인접지역의 노후 단독주택 정비방안으로 아파트 건립 외에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애초 광주천을 도심재생 3대 축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조성사업, 사직공원 리모델링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사업 등과 연계하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광주천을 구도심 재생의 핵심 요소로 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조화를 이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심의·의결된 ‘남구 양림 2구역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안)’은 12만8997㎡ 중 광주천에 접해

있는 2만5284㎡에 15층 이하 55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도록 했다. 나머지 구역은 거주주민이 자력으로 한옥지구

를 조성토록 했으나 지원대책이 전무해

사실상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동구 학동, 남구 방림동, 북구 임동 등에 이어 또다시 광주천변에 고층 아파트 건립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은 광주천을 따라 형성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을 최고 50층 이상 아파트로 채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도심 내 10km 이상 구간 양편이 거대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일 전망이다.

광주 구도심 재개발 사업은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만을 위한 ‘땀질 처방’이 돼선 안 된다. 광주천과 인근 단독주택 지역, 역사문화자원 등을 서로 연계·정비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문화중심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

광주시는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 있고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도심 재생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 막지사 ‘유감 발언’ 심각성 깨달아야

박준영 전남지사가 핵심 현안사업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와 관련,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 해결이 안되면 포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정부 승인을 거쳐 추진한 사업인데도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 대해 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지난달 말 민선 5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가까스로 투자처를 찾아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고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양도·양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며 강한 유감을 표출했다.

박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MB 정권의 전남 배척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J프로젝트는 전남도의 핵심 현안임에도 지난 8년 동안 착공은커녕, 부지 양도·양수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남군 산이면 구상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도, 땅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평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재감정을 요구하면서 착공이 기약없이 미뤄진 상태다. F1 경주장 부지 역시 감정 평가 방법의 이견으로 멈춰섰고 삼호지구는 감정평가서 제출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내세우며 총력을 기울였지만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도 땅이 없어 홍보판 하나 짓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차별이 또 어디 있는가. 정부의 무관심과 비협조가 도를 넘어 노골적으로 흘러내고 있는 것이다.

J프로젝트와 F1은 전남만이 아닌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점사업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너무도 당연한 이유다. MB 정권이 이들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한다면 ‘실재한 정부’로 남을 공산이 크다. 지역민심이 방관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無 等 鼓

1975년 4월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인접국 캄보디아의 론 놀 정권도 급속히 쇠약해졌다. 폴 포트가 이끄는 급진 좌익무장단체인 크메르 루주(Khmer Rouge·붉은 크메르)는 게릴라전을 통해 영토를 장악하고 국명을 민주 캄푸치아로 바꿨다.

전 정권의 부패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환호했다. 폴 포트는 농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고 도시인들을 농촌에 강제이주시키고 화해와 사유 재산제도를 폐지했다.

그 다음이 문제였다. 과거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지식인과 정치인, 군인들을 무차별 학살했다. ‘국민 개조’라는 미명

표로 현재 89%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명품 영산강을 주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

〈익산국토관리청장〉

킬링 필드



목은 당시 대학살로 생긴 집단 무덤에서 파냈다.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받은 행은 고르는 “내 조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킬링 필드’의 핵심 전법 4인방에 대한 재판이 30여년 만인 지난달 27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시작됐다. 독일의 나치 전법들을 단죄한 뉘른베르크 재판처럼 반인륜범죄의 진실을 낱알이 가려내

고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 캄보디아인들의

의 한을 풀어주기를 고대한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結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康虎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촌매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교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